

'96년 수자원정책 및 예산

김 영 환*

1. 수자원 현황

지난 60년대부터 본격 시작된 경제개발에 부응하여 늘어나는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등 수자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하천연안지역에 인구와 자산이 밀집됨에 따른 홍수피해의 경감을 위하여 하천제방 축조 및 홍수에경보시설 확대 등 수자원개발과 방재대책에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덕분에 지난 '94년부터 계속된 남부지방의 가뭄을 댐방류량 조절 등 효율적인 댐운영과 광역상수도를 통한 물공급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95. 8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시에는 댐운영을 통한 홍수조절과 신속한 홍수에경보로서 수해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었다.

그러나, 해안·도서지역과 대규모댐 및 광역상수도 혜택이 못 미치는 내륙지역은 일시적인 가뭄에도 식수부족현상이 빈발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하천의 개수율은 '94년말 현재 60%에 불과하여, 70년대 연간 1,230억원이었던 홍수피해액이 90년대 들어서는 연간 3,320억원으로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수자원관리에 있어서는 물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산재돼 개별적, 독립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수자원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영월·제천간의 물분쟁에서 보

듯이 수리권제도의 미확립으로 인하여 수자원확보 및 사용에 대해 지역간에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연적 여건으로 인한 수자원의 지역적·계절적 편중 현상을 극복해야하고, 다원화된 수자원관리 기구의 협조체제 구축 및 유수인용허가에 대한 상·하류지역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댐소재의 지역적 편기로 인해 지역적으로 골고루 용수를 배분해야 하는 반면 지자체의 본격 실시로 지역단위의 물이용 주장이 더 높아져 댐 상·하류 지역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수자원의 개발·관리·보전의 어려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직면하여 있는 지역적 불부족을 해소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등 수자원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 다가오는 2000년대의 물문제에 대비하여 수자원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동시에 수자원관리에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수자원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2. 21세기를 대비한 '96 수자원정책

금년에는 2001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자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시책사업 등에 '95년 보다 24%나 증액된 총 1조 988억원을 투자하여 정부총예산 대비 1.75%가 되는데, 이로서 수자원분야 예산이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수자원분야 예산은

*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장

표. '96년도 수자원 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 총사업비 | '95예산 | '96예산 | 증감(%) |
|-------|--------|-------|--------|-------|
| 계 | 92,932 | 8,885 | 10,988 | 22.7 |
| 다목적댐 | 31,009 | 3,209 | 3,848 | 19.9 |
| 치 수 | 27,454 | 2,010 | 2,634 | 31.0 |
| 광역상수도 | 29,004 | 3,016 | 3,753 | 24.4 |
| 공업용수도 | 5,375 | 650 | 753 | 15.9 |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되는 '92년 4,685억 원, 정부총예산대비 1.21%와 비교하여 볼 때 대폭 확충된 금액이다.

수자원 기초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수문조사 예산도 '92년에 11억원(503개 수문관측소)에서 '96년에는 74억원(510개 수문관측소)으로 확대하여 수자원계획 뿐만아니라 홍수·갈수를 대비한 하천의 수위·유량·수질 측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주운기능부여 등 하천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하고, 하천을 쾌적한 생활공간 및 동식물의 서식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가꾸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96년에는 2001년 이후를 대비하여 2011년을 목표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자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 개발·이용·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수자원관련 계도를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더구나 금년에는 합리적인 지하수의 이용·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는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실태 및 개발계획 등을 담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로서 여태까지의 지표수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수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물관리정책을 수립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가. 주요 시책 사업

1)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시설 확충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물의 절대량을 확보하는 다목적댐과 지역적으로 고르게 배분하는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1년까지 수자원 이용율을 23%에서 26%로 확대하고,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35%에서 60%로 제고하여, 이들 시설이 가뭄과 홍수에 충분한 역할을 발휘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다목적댐 건설에는 '95년보다 20% (639억원) 늘어난 3,848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인 남강·용담·황성·밀양·영천·탐진댐등 6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추진계획인 영월·적성댐중 영월댐은 조사설계에 착수하며, 또한 2001년 이후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94년부터 시작해 온 전국 댐후보지 조사사업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댐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에는 '95년보다 23% (840억원) 늘어난 4,506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인 수도권(V 단계)광역상수도 등 12개 사업중 낙동강(II 단계)과 부안댐 광역상수도를 완공하고, 대청댐II광역상수도 등 6개사업을 새로이 착공함과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인 경기북부권 등 3개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설계를 실시하며, 또한 2001년이후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댐 및 상수도 조사사업 예산도 금년에는 대폭 확대하여, 기존댐 건설이후의 수문상황 변동 등을 고려하여 댐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는 등 기존댐운영의 최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존댐 용수공급능력 조사」를 1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댐후보지 조사사업과는 별도로 홍수조절능력 제고와 용수공급능력확보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댐건설 타당성 조사」를 2~3개소를 대상으로 10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게 된다. 또한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 전북권, 전남

권, 강원권, 경북권, 경남권)으로 구분하여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하여 수도권 지역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2) 하천개수사업 및 홍수예경보시설 확충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2001년까지 하천제방을 77%까지 정비하고 과학적인 홍수예경보시설을 현재 한강 등 5대강에서 중소하천인 안성천 등 10대강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95년보다 31%(624억원) 늘어난 2,634억원을 투자하여 한강 등 5대강 수계 치수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제방 180km를 축조하여 전국 하천 개수율을 62%까지 달성하고, 중소하천인 안성천에도 현대적인 홍수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6월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다.

3) 수자원 기초조사 확대

수자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수문 및 지하수조사 등의 수자원기초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측소를 37개소 설치하는 등 지하수 조사사업에 28억원을 투입하고, 수원의 다변화를 위해 가물상습 지역인 도서·해안지역이나 임해공단에 해수의 담수화 조사를 8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게 된다.

또한, 남·북한 수자원 공동개발과 수도권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임진강 유역조사에 2억원을 투자 하며, 장기적인 가뭄대책과 수질사고시 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주 등 90개 지점에 대해 11억원을 투자하여 유량조사를 실시한다.

4) 경인운하사업 착공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되는 경인운하는 날로 심해가는 내륙교통난 완화와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굴포천의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중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후, 하반기

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95년도에 본 사업의 수송체계와 시설규모에 대한 검토 결과 경인운하는 수도권 컨테이너, 철재, 자동차, 바다모래 등 2021년에 연간 4,6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하여 폭 100m, 깊이 6m의 인공수로 19.1km를 건설하고 갑문5기와 운하 양 입구에 하항터미널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원, 건설기간은 약 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인운하 건설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연안수송은 물론 하천을 이용하는 내륙주운의 기술개발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으며, 본격적인 내륙주운시대로 접어들어 수송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5) 하천경관사업 추진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경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천환경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고 경안천 등 도시하천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24백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하천환경관리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천환경관리방향과 효율적인 하천환경정비 업무추진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하천환경정비 기술을 제공하는데 있다.

나. 주요 제도 개선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2000년대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유역별, 지역별 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을 목표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계획, 방재대책 등과 향후 물관리기본정책을 포함하는 향후 수자원의 종합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이용·관리 방안에 대한 수자원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2) 수자원기본법 제정 검토

다원화되어 있는 부처간 물관리업무의 조정기능 강화 및 법적구속력을 부여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타 부처의 수자원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법정화 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자원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수자원에 대한 기본정책을 제시하고 여러부처에 나눠져 있는 물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통제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수자원 개발·관리·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다.

3) 지하수법 개정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합리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지하수법이 '94. 8부터 시행된 이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실패공 방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개발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지하수 조사기관을 현재 기초조사는 통상산업부 개발조사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실패공 관리 등 오염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며,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일선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4) 공유수면법 제정

공유수면 관리청과 매립 면허청이 서로 상이함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매립기본계획이 매립 예정지를 지정하는 사업계획의 성격으로 되어 있어 매립정책방향 제시가 미흡한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안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공유수면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화·자율화 추세에 부응하여 다원화된 매립면허 권한 및 관리권을 단순화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뿐 아니라 이용·개발·보전 등 공

유수면 전반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인 공유수면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사업계획으로 바뀌어 항만청장파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 하천법 개정

현행 하천법은 하천 상·하류의 관리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수시 효율적인 수리권 조정이 어렵고, 제방축조 등 하천공사시에 다른 법률의 의제규정이 없어 토지수용법 등 각 법률의 모든 절차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용 및 인·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법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일정수량 이상의 물사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간에 물사용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하도록 하며, 하천관리청별로 수리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하천물 이용자간의 합리적인 물사용을 유도·조정하고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간주하는 등 기타 15개 법률인·허가사항의 의제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3. 결 언

오늘날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물에 관한 수량과 수질면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60년대부터 다목적댐 등 수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늘어나는 각종 용수수요에 대처해 왔으나 근래의 극심한 겨울가뭄 등에서 보듯이 물공급체계의 한계에 다다른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러한 물공급 위기는 앞으로도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물은 무한한 자유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유한한 공급재라는 인식을 갖고 각종 수자원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수자원의 개발, 이용, 보전에 종합적, 합리적으로 대처하는데 전 역량을 투입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